

# ‘전남 30년 숙원’ 국립의대 2030년 개교한다

복지부 ‘보정심’, 2027~2031년 의대 정원 확정 최종 결과 발표  
전남의대 배정 인원은 연간 100명...“개교시기 앞당겨야” 지적도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가 설립된다. 전남도가 1990년 의대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이후 몇 차례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이제 서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수요에도, 상급 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 ‘원정 수술길’에 올라야 하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30년 넘게 호소해온 국립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밝힌 2030년보다 개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포함, ‘2027~2031년 의대 정원을 논의한 제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 국립의대는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며 배정 인원은 연간 100명으로, 현재 전남대와 조선대 모집 인원(125명)의 80% 수준이다.

보정심은 이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에는 현재보다 490명 증원된 3548명으로 늘어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으로 확대된다.

2030년 이후에는 전남 국립의대 정원(100명)이 포함되면서 3871명으로 늘어난다.

전남도는 오는 2027년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완결되지 않은 점, 의

대 개교를 위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준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작용했다는 게 지역 의료계 분석이다.

의평원은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의대 증원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첨예함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의 이른 개교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지는 미정이다. 다만,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대학본부와 의대를 분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목포·순천 중 한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대학본부가 목포대에 들어서면 전남 국립의대는 순천대에 들어서는 식이다.

정부는 이날 전남 국립의대 신설 외에도 전남과 같은 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 강화대책도 내놓았다.

당장, 2028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원 지역의사제에 배치키로 해 전남대와 조선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확정 소식에 환영문을 내고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가 100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2030년 개교를 확정했다”면서 “전남의 구조적 의료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0년 전남 지역민들의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면서 “전남 국립의대가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기자재 등을 충실히 갖추고 차질 없이 설립돼 지역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설 대목 봄비는 말바우시장 설 명절을 앞둔 10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이 제수용품과 식재료를 고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가시밭길’... 핵심 특례 보완 되나

재정·규제 완화 조항 대거 ‘불수용’  
법안 심사 과정서 반영될지 주목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성패를 가를 특별법이 이 국회 법안심사에 올랐으나, 중앙부처의 부정적 기류에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와 전남이 제시한 핵심 특례안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부분 ‘삭제’ 의견을 제시해 법안 처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 5건을 비롯해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항 중 지역 소멸 대응과 직결된 핵심 특례 조항 대부분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삭제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는 “부처 간 의견조율 등을 거쳐 마련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원안이 아닌 ‘정부 조정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문별로 재정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 조례로 지방세 세율을 가감 조정하도록 한 특례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등에서 ‘삭제’로 표시됐고, 레저세 관련 조항도 빠졌다.

정부는 지방세 특례는 별도 법률 체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재정 자치권 확대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도시개발에서는 군사시설 이전지역 지원(제214조·제217조) 조항에서 ‘특별수요 보정 지구 지정’ 등 일부 조항이 삭제돼 이전지 주변 투자·정주 지원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카지노복합리조트 수익을 관광기금으로 환원하는 규정 등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에 무더기 삭제 의견이 제시됐다.

저수운 피해 막기 물고기 월동장 마련 비상 ▶6면

KIA 아미미 캠프 - 정해영 “마무리는 자부심” ▶18면

일하는 청년 빛나는 미래 - 광주신세계 ▶22면

특례조항 무더기 삭제에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자 전남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수용 특례를 적극 재검토하겠다”며 재정·권한이양 TF 구성을 약속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부처에서 수용거부 의사를 표명한 재정·권한 이양 특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결국,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항들이 얼마만큼 살아나는가에 따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실효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 부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의 374개 특례 조항 가운데 119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민주·혁신 합당 불발...광주·전남 지방선거 경쟁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 양당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합당 유보에 따른 민주당 경선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혁신당의 거센 도전이 예상되면서 지방선거 판세도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의총을 통해 지방선거 이전 합당 추진 불가 입장을 확인했고, 혁신당도 ‘지방선거 독자 노선’을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청대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의총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 합의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

고 의견을 모았다”고 의총 결과를 전했다. 지도부에서도 합당 반대 여론이 강했고, 당내 의원들도 불가론을 펼치며 정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이전 합당이 불가능해지면서 호남 선거구의 양당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영입한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 경쟁’의 신호탄을 쏘았다. 조국 대표도 호남 지방선거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의 이날 서울에서 광주지역 기자들과의 오찬을 하며 “민주당과 합당은 쉽지 않을 것이며, 지방선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시대의 명작

A Timeless Masterpiece  
S-Class

Mercedes-Benz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중 중교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정비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d 4MATIC · 배기량:2989, 공차중량:2145, 자동9단, 복합연비:11.3(도심연비:11.3, 고속도로연비:15.9),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8  
· S 450 4MATIC · 배기량:2998, 공차중량:2090, 자동9단, 복합연비:10.1(도심연비:8.8, 고속도로연비:12),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S 450 4MATIC L · 배기량:2998, 공차중량:2065, 자동9단, 복합연비:9.9(도심연비:8.6, 고속도로연비:12.1),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2  
· S 500 4MATIC · 배기량:2998, 공차중량:2105, 자동9단, 복합연비:9.7(도심연비:8.4, 고속도로연비:11.7),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7  
· S 580 4MATIC · 배기량:3982, 공차중량:2150, 자동9단, 복합연비:8.6(도심연비:7.3, 고속도로연비:10.9), 등급:5, 복합CO2 배출량:20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